

# 여야, '김명수 사퇴' 공방... "정쟁 말라" vs "자격 상실"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의힘은 6일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로 파문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집중 공세를 펼쳤

다. 특히 김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정권지킴이", "정부·여당의 충견", "로비스트 대법원장"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민주당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탄핵의 명분 이길 수 없어" 국민의힘 "김명수,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 빙의"

김여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을 들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한 것"이라며 "이것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욕을 느끼게 했다고 외

치는데, 김 대법원장은 쇠사슬과 인간 벽 뒤에 숨어 사퇴는 절대 못 한다며 버티고 있으니 대법원장이란 고결한 자리에 큰 흠결을 남겼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했다.

김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럼이 없는 나라, 진짜 사기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동의안 통과를 보면서도 법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 유린을 막고 법치를 지켜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 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행위를 문제 삼고 "비인격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코로나19로 닥친 고등교육의 위기 '기회'로 바꿔야"

### 서동용 의원, 대학생 기자들과 온라인 간담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최근 사회 주요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입

장을 전달하기 위해 쿠키뉴스와 대학 학보사 소속 학생기자들로 구성된 유니프레스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동용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교 개혁에 주목하며, 한국의 고등교육이 '융합형 인재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40년이나 5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인재가 한국을

이끌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에 존재하는 과들은 과거에 설정한 현재의 목표다. 미래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에 '지방균형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구조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 의원은 "수도권이나 지방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엄청난 돈을 쏟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재정 투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교육의 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틀 안에서 학생 1인당 등록금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닥친 고등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윤석열, 이번에도 '인사 패싱'? 박범계 장관, 휴일 기습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이른바 '추미에 라인' 검사들이 재신임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을 전보 인사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 총원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최소한도 규모로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체널A 사건', '윤석열 총장

처가·측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유지했다.

또 이 지검장과 함께 '추미에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심국장은 경우 사실상 '영전생'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도 유임했다.

뉴시스

##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영업보상 외 임대료·대출이자·공과금 감면 빠짐없이 담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손실도 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해, 기존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위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